

#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 참가단체 발언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회는 끊임없는 성범죄 소식에 놀라움도 식상해 질 지경입니다. 성범죄는 특정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령, 계급, 학력, 직업, 지역 등 여성을 구별하는 다양한 범주, 그 어느 것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폭력이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성매매는 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게 하며, 돈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성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을 상식화시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남성이 늘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으며, 성매매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폭력입니다. 어떤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성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여성들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일상화되는 것이며, 성매매는 성폭력입니다.

한국사회는 2004년 윤방법을 폐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그 때, 저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일행에게 다가와, 축하한다. 이 법의 통과는 당신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었냐, 법이 통과되었지만 법의 적용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온갖 방해와 백레쉬는 상상을 초월했고, 현장의 적극적 대응없이 성매매방지법은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면서도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연초부터 ‘#미투’운동이 촉발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그 물결은 끝이 없었고, 우리 사회는 젠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8월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29개 성매매방지 상담소를 9개로 줄이라고 했고, 이에 여가부가 반대하자 23개로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기재부는 상담소가 전국에 29개나 있는데, 상담실적을 볼 때 성매매상담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수가 2005년 실적과 비교하여 반도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성매매 피해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성매매산업이 줄어들었습니까? 성매수자들이 없어졌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4대악에서 성매매를 빼버리고 그만큼 성매매방지 정책은 후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요구는 묻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미투운동은 젠더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재편하고 성평등한 사회, 젠더 폭력이 없는 사회를 열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매매는 폭력이 아니며,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성매매 행위자 쌍방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은 자발적인 범죄행위 가담자로만 보여질 뿐이며, 그들은 처벌해야지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매매가 곧 성폭력이라고 더 큰 소리를 내야합니다. 성폭력을 조장하고 만연시키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성폭력이라고 더 크게 외치고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중요도에서 밀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대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십대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권력으로 작동하는 연령이라는 범주에서 약자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 경제, 젠더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십대소녀들은 성인에 의해 규율되고 지도되지만, 성적 행위에서만은 성인을 리드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성인들의 성적 욕망에 소비되

고 이용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는 동등하게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십대여성들의 자발성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진보와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은 십대여성을 돈으로 사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성매수 범죄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십대여성들에게 자발/강제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의식과 정책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수되고 있는 십대여성들은 위계, 위력에 의해 성착취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모든 이런 아이들을 피해자로 하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하고 다닐것인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교육방안을 여가부가 내놓지 않으면, 법무부는 절대 아청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십대소녀들이 성매매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법무부는 십대소녀들을 피해자로 본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입장으로 볼 때 어디가 피해자로 본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본인들만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법적권리행사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십대소녀들에게까지 자발/강요를 묻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 성매매피해자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의 입장이나 법무부의 입장은 성매매를 성폭력으로 보지 않고, 자발과 강제라는 도식으로 피해와 범죄자를 구분하겠다는 동일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한목소리로 외쳐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공동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젠더 평등한 사회를 이뤄내는 데 우리가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2018. 9. 19.